

최근 한국 외교의 주요 현안과 과제

- 출처 :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 일시 : 2005년 4월 25일
- 연사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 주최 : 중앙일보,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현 외교의 중대 현
안은 북핵 문제, 한
미 관계, 그리고 한
일 관계로 요약할
수 있음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되니까 각계에 권위자 되시는 분들만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좋을지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북한 핵 문제하고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난의 외교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도전이 상당히 많은 때인 것 같습니다. 도전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외교부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외교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저한테 주어진 아주 큰 과제입니다. 최근에는 외교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교부가 외교를 전유물로 삼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시민사회, 언론 전문가 집단 등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민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 하고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국익차원에서 대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서로 감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이야말로 ‘외교통상부의 숙명적인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는 국익에 입각하여 주변국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상대국 입장에 서서 우리 국익을 그르치는 일은 없음

흔히들 말할 때 친미파, 친일파, 친중파라고 말씀하시는데 외교부에는 중요한 국가와 관련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넓은 인맥을 가진 외교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친미파라고 하는 내용이 혹시 부정적인 의미로 비추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신념이 없이 상대국에 입장에 이끌려 우리 국익을 그르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러한 사람은 외교부에 없다고 언제 한번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나 국가 이익에 바탕을 두어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이 우리와 가깝고 또 이해관계가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와 인맥을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1. 북핵 문제

우선 북핵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언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나 워싱턴타임즈 또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 북한이 혹시 핵 실험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등 관련 국가들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기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보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확

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이 중단이 되었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포착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혹시 그것이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일종의 기술적인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파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북측의 오판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임

만약에 북한이 그러한 식으로 핵실험까지 한다면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북한이 그야말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방한중인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만나서 여러 가지로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북한은 핵을 개발했고 6자 회담에 더 이상 오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 북한 외교부의 비망록을 통해 유사한 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북한이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군축회담 이야기를 꺼내는 등 여러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이 향후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고도의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한, 미, 일, 중, 러 다섯 나라 모두는 이 문제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확실한 견해와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그 사이 중국과도 여러 차례 외교적인 접촉을 해 왔었습니다. 물론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겠죠. 우리로서는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

조했고, 또 중국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박봉주 북한 총리도 갔었고 또 강석주 북한 외무부 제1부상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6자회담에 조속한 복귀,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북한에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을 주권국가로 본다는 리스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은 적절하게 반응해야 함

리스 미 국무 장관은 지난 3월20일 서울에 왔었을 때 ‘북한을 주권국가로 본다’ 고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을 어디까지나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서 6자회담에서 대하겠다, 또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미, 북간의 양자회담을 갖겠다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또한 리스 장관이 일본과 중국에서 계속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북한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조속히 6자 회담에 들어오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리스 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와 같은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적대정책을 버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리스 장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등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말에 담겨있는 우회적인 의미를 북한이 알아듣고 6자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하느냐, 사실 저도 답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한 당국간에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6자회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또 통일부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그저께 우리 이해찬 총리님과 김영남 위원장간에 회담이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 조

속한 시일 내에 남북한 대화를 할 가능성도 있고, 이것이 6자회담으로 조기에 연결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핵보유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겠다는 의도는 매우 비현실적임

5월 9일에 러시아에서 2차 대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그 기회에 우리 중국과 한중 정상회담과 외무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는 아셈 외무장관 회의에 한중, 한일 외무장관 회담과 한, 중, 일 3개국 외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 6자회담의 재개라든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이러한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핵무기는 결코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고 정치, 경제적인 고립만을 자초하고 심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북한이 아주 무모하게 핵 실험까지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결국엔 북한이 스스로 이제까지의 고립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으며, 현재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도 없음

한 가지 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독일 방문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정부로는 북한의 붕괴나 급격한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한이 계속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도 부시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무장관, 국방장관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서 다자적인 안보 제공을 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국제 사찰을 받으면 일단 잠정적인 범위 내에서 다자적인 안보제공을 하고, 핵의 전량 폐기가 확인될 경우에는 다자적인 완전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북한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작년 6월에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에서 제시한 안에도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한미 관계

미국과의 공조가 불안하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름

그 다음에 한미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관계에 관해서 사실 요즘처럼 많은 관심들이 있을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해서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한미 관계가 그야말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한미 관계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인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잘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한미 관계에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과 특히 전문가 그룹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아무리 한미 관계에 이상이 없다, 한미 관계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공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몇 가지 얘기들이 무슨 균형자론이라든지, 친미파 발언이라든지, 또 아니면 분담금 협상 등 국민들의 우려나 걱정을 자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깊이 이해하면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한미 관계의 우려가 있을만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이 증폭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국

민들이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미 관계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한국이나 미국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현재 한미 관계는
지난 과거의 다소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동등
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과도기임**

지난 50년간 거의 안보중심의 한미 관계가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군사당국간, 외교당국간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일방적이고 거의 절대적인 의존관계에서 벗어나서 상호 호혜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거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이러한 점들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지나 마찬가지로 의견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외부적으로 한미간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 졌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현안문제를 우호적이고 상호 호혜적이고 윈윈(win-win)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미 동맹관계가 잘 이끌어져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많은 안보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15년, 2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참여정부 2년 내에서 거의 다 해결되고, 적어도 해결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이나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간 중요한 현
안을 해결하였음**

일례로 용산 기지 이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제기가 되었던 것이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고, 주한미군기지 재조정 문제도 상당한 논란을 겪으면서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물론 참여정부에서도 용산 기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 분담 문제 등에 관해서 국민적인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에 비준 동의까지 받아서 이 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한 논란 과정은 다른 어떤 정부 때보다도 참여정부에서 크게 부각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라든지 정치적인 성숙도와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 참여의식 등이 많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생된 현상이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논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가 말을 논란이라고 합시다만, 토의의 과정,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제는 주요한 외교 사안을 정부 혼자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는 정부가 또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중요한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주한미군 일부 감축 문제도 우리에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충격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호 윈윈(win-win)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아마 이러한 1/3 규모에 해당하는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우리사회 내의 안보 불안이 상당히 조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말 90년도 초에 주한 미군 7천명이 감축되었고, 그 이후에는 주한 미군의 감축계획이 중지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한반도에 있어서 안보 불안을 최소화하고, 또 상호 방위 협력도 방어 능력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한미군 경비 부담 문제나 미국 대사관 부지 문제,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근로자 감축 문제 등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할 것임

방위비 부담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 주한 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나라는 6억 2천만 달러를 부담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에 한국에 주둔하면서 드는 경비가 26억에서 28억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20년 이상 현안으로 남아 있던 주한 미국대사관 부지 문제도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주한 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난번에

감축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주한 미군의 1/3인 1만 2천 5백 명이 감축되고 주한미군 기지도 지금 현재 43개 있는 것 중에서 2개의 큰 허브로 통·폐합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원 감축이 자연스럽게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이 문제가 한미간에 안보상이나 또 한미 우호동맹 간에 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 감정은 현안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한미 동맹관계에 있어서 반미 감정문제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반미감정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어떤 이념적이거나 미국을 벗어나는 면이 아니고 관심사, 즉 현안에 대한 반대나 이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이것은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반미감정의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점차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반미 감정이 큰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미 감정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에도 늘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나 한국 국민만 반미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고 미국 국민이나 미국 당국도 반미감정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 미군은 근-네이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부대 방문 초청 행사도 있고, 또 영어를 교습한다든지, 수재나 태풍 피해가 있었을 때 직접 미군들이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등등 이러한 모든 노력들로 인해서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한미 관계가 국익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미국 국민들도 최근에 우리 국민의 인식과 생각이 다양화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동북아 균형자론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정부의 설명
이 충분치 않았던
것은 사실임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된 것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들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저도 국회에 가서 하루 종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북아 균형자론의 역할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바로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점에서 미진했던 것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왔고 또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균형자란
물리적인 힘을 바
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지향
적인 의미를 가짐

동북아 균형자론은 우리가 정치학에서 배우면서 힘의 균형에 입각한 세력 균형이라든가 그런 것에 입각한 균형자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9세기나 20세기 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또 미국이 그간 냉전 체제 과정에서 수행해 왔던 그런 균형자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치 지향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 미-중 관계, 그리고 일-중 관계, 또 북한 핵문제 까지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의 요소가 많아서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 초부터 동북아시아의 구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도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북아의 조화로운 발전, 공동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화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한 조정자가 아니라 가치 지향적인 면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외교적 능력이 확대되고 있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불가능한 것이 아님

물론 의문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벌써 35년 외교부에 있습니다만, 과거에 외교관 생활을 할 때와 비교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국제회의에 가서도 의제를 설정해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외교력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후에 칠레의 민주주의 공동체에 갑니다만 몇 나라 안 되는 기조연설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재국인 칠레의 대통령이 먼저 기조연설을 한 후에 제가 기조연설을 하고 회의에 상당부분을 주재하는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또 환경문제라든지 기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 회의나 국제 아젠다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의제를 설정해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정당성에 있어서도 우리의 역할을 상당 부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이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면서 어떤 하드 파워보다는 소프트 파워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한일 관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이만큼 강한 비판을 받은 적이 없었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독도와 역사왜곡 문제로 해서 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또 이로 인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독도 문제는 우리 문제지만 역사 왜곡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을 포함해서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중국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존경과 신뢰를 받는 나라로 발전하기를 촉구함

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일본도 이것을 상당히 뼈아프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이만큼 강한 비판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일본 문제라든지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거의 독일에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스스로 이러한 여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 언론 스스로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뼈아프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이 앞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좀더 존경받을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이슬라마바드에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그랬고 5월 7일 교토에서 있을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일본이 아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인식을 깊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일 정상 회담도 자카르타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일본 외상이 중국으로 가서 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던 것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도 문제는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토 지배권이나 영유권을 더욱더 확실히 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문제가 국제분쟁 지역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는 좀더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생각합니다. 독도 문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우리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이

며, 다 나아가 역사적인 문제까지 전부 다 혼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나갈 경우에 일본이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존립하기가 어려울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일 시위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에 두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30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발제를 이정도로 끝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한 10분씩 세 가지 외교 현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장달중 교수님하고 백종찬 소장님, 또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의 말씀을 듣고 저도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이규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감사합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국 외교가 무척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가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라든가 6자회담 문제, 주한미군 문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 문제, 독도 문제 등 모두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의 큰 주제들입니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힘든 작업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두 분 토론자를 모셔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달중 교수님

께서 먼저 토론에 임해주시죠.

(장달중 서울대학교 교수) 장관님으로부터 평소 듣기 어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자신의 견해와 더불어 장관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여쭙어 보는 형태로 한 10분 쓰면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 외교부 반기문 장관님의 오늘 발표를 듣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첫 번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확실히 체감온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있으면서도 아마 이해하려고 하는 지식인들 중에 한 사람일 텐데 말씀이죠. 그래서 우선 여기에 오늘 여러 전문가들도 전략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와 계시니까 논의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만 올릴까 합니다.

국익이라는 개념의 혼선 외교 노선의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음

첫째, 제가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외교정책에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국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난 40년간 분명하게 반공이라든가 한미동맹이라든가 경제성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대충 이해를 하고 정부나 국민간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익이라는 개념에서 혼란과 혼선이 오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참여정부 이후 2년 반이나 지났음에도 그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이런 것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1년간은 이런 혼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 입장에서 볼 때 장관님께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 중심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

의 흐름이 좀 달라졌다, 저는 그것이 아직 확실치 않아서 장관님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대미 자주 외교 노선은 콜리 즘으로 설명할 수 있음

미국으로부터 자주적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 외교정책을 얘기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콜리즘입니다. 저는 콜리즘이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나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콜리즘에는 보통 ‘역사적 행운(historical fortune)’이라는 얘기를 함께 합니다. 드골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리 미국을 귀찮게 하고 화나게 만들어도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드골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외교 기조가, 만일 제가 해석한 게 맞는다면, 콜리즘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정책화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신문 칼럼에서 균형자론 같은 것도 이런 흐름의 하나라고 한다면 빨리 정치적 토론에 붙여서 그것이 국민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국가이익의 개념으로 승화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균형자론에서도 소프트 파워측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정부 당국자들 설명 자체에 상당한 혼선이 있었고 아직 저 자신도 설명하라고 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교 기조를 둘러싼 내부적 갈등은 없는가?

그 다음에 이러한 혼선이랄까, 국민들이 느끼는 혼선이지만 정부로 봐서는 건전한 외교 기조를 둘러싼 내부적 갈등의 표현인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일반 국민들 보수층에서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외교부가 쉬운 말로 하면 죽을 썩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핵 불용 원칙에 대한 정책 수단이 있는가?

그 다음으로 우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핵 불용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핵 불용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무엇인가? 국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다른 회의에 가서 질문을 받으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핵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의 발언도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조금 혼란스러운 흐름이 있지 않았는가 합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칠레 가시기 전 북핵문제는 구도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구도적 안정’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구도적 안정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셨기 때문에 뜻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국가간에 공통의 이익이 있어서 미국 마음대로 안 되고 아마 우리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잘 해결될 것이라는 뜻으로 얘기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젊은 지식인들 중에서 그런 견해들을 여러 지상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균형자론이 나오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 보유 선언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런 구도적 안정 발언에서부터 넘어가는 것이 매끄럽지 않다, 즉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핵 불용 원칙은 미국이나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할 것 없이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공동의 이익이 바로 공동의 정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정책을 이끌어내야 핵 불용을 위한 정책 수단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북한 핵의 불용이라고 하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는 이르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미묘한 점이 있을 텐데 장관님께서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핵 불용 원칙이란
공동의 이익을 위
해 공통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맹관계가 상당히
중요함**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핵 불용 원칙이라는 공동 이익을 위해서 공통 정책을 만들어 내려면 역시 동맹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관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동맹을 위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장관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이제는 동맹이 정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이 동맹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둘러싼 공통의 정책이 나타나지 않으면 동맹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미 동맹관계는 상당한 시련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미 감정이 구조
적으로 심화되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한미 관계로 말씀을 옮겨가면, 여기에서 체감적으로 장관님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슈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한미 관계가 좀더 굳건해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에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미 감정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완화되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구조적인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지요. 이라크 파병 때 장관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셨겠지만 우선 열린우리당 안에 전대협 출신의 젊은 386 출신 국회의원은 12명인데 그 중 딱 한 사람 빼놓고 전부 이라크 파병에 반대했습니다. 반대하지 않은 한 명은 당시 의장 비서실장이었을 텐데 아마 직책상 반대를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정치를 주도하는 집권당의 주요 세력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 구조적인 반미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들 중에 한 분이 미국 그레그 대사가 주한 대

사를 할 때 대사 관저를 침입해서 구속된 적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 그 대사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그레그 대사를 뉴욕에서 만나서 그 얘기를 전달했더니 그레그 대사가 그때 절대 너무 심하게 이 사람을 다루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다고 하고, 서울 가면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상당히 변화된 분위기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미감정은, 특히 젊은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상당히 퍼져있습니다. 학교에는 독도 문제, 일본 문제, 교과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대자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하고 지난번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하고는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 당시에 지금 일본 민주당(民主黨) 당수 오카다 가쓰야(岡田勝也)의원이 동료 국회의원 몇 사람을 데리고 제 방에 와서 얘기하다가 나가면서 대자보를 설명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정작 일본 교과서 왜곡과 관련된 대자보에 일본에 대해서 한 글자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은 한국에서 반일감정은 전부다 정치가들이 동원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일본이 없는 것이라고

독도 문제도 주권
차원이 아닌 미국
제국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 해석하
려는 시도도 있음

답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유심히 보니까 독도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냥 독도의 주권 문제로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틀, 즉 미국 제국주의의 큰 틀 속에서 해석하려는 흐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주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금요일에 어디 회의를 갔더니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왜 미국은 핵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은 핵을 못 가지게 하느냐고 우리나라의

NGO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로서도 외교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결국에는 외교정책도 국민여론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국가의 실익을 위해서는 국민여론을 따라갈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장관님께서 이점을 강조해주신 것은 상당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균형자론에 대해서는 장관님 말씀을 들어도 솔직히 분명한 게 없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다듬어서 얘기를 해야 될 걸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친미 발언과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정치학계에서도 보면 미국과의 대화 채널이 어느 한편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고 경도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 경제연구소를 통해 두 번에 걸쳐 미국에 가서 씽크탱크라든가 백악관 국무성의 여러 사람을 만나 봤을 때도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뭐냐하면 신 주류의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어 못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 만나서 몇 사람 이름만 대고, 또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날 빈정대기만 한다 이겁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외교부가 너무 친미적이니까 외교부를 혼을 내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얘기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기숙 공보 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러한

반미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對 여론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흐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가 對 여론 외교(public diplomacy)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국책 연구 기관들이 이런 대화의 채널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특히 미국의 썬크탱크의 마이클 그린 같은 친구는 백악관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습니다만 본인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는 마크 트웨인 소설을 인용하면서 한미 관계는 외부에서 시끄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역시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對 여론 외교(public diplomacy)를 할 때 외교통상부가 너무 구체적인 사안까지 민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대 여론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당분간 냉각기를
갖는 것이 옳다고
판단함

하나는 일부 한일 관계인데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는 절대 우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래 지향적으로 이야기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언제든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천황제도를 존속시킨 나머지 봉건적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고, 따라서 역사 왜곡 문제는 마치 격세 유전과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제가 12월에 일본의 최고 외교 책임자를 지낸 분이 야스쿠니 신사에 한번 가 보고 가라고 해서 갔더니 15년 전에 갔을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전쟁을 미화하는 노래, 열 네 살 소년이가미가제에 가서 국가를 위해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가서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야스쿠니 문제의 하나로 교토 대학교 교수가 쓴 것을 며칠 전에 읽어보니까 야스쿠니에 현재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안 오고 해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나, 정치적으로 극우적인 정치인들을 동원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냉각기를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너무 빨리 정상회담을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잡아서 제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백종천 세종연구소 소장) 우선 장관님 바쁘신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장 교수님께서 많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그동안의 6자회담의 재개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또 북한이 외교적 차원에서 보면 지금쯤은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의 발언 등 유화 제스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올 만도 한데 안 나온다, 참 답답하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앞으로 북한에게 상당히 불리한 또는 북한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외관상 이유는 미국과 북한의 체면 싸움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인식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조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과거보다 다소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북한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

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보건대 이 싸움은 언뜻 겉으로 보기에 체면 싸움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지 않고 과거 잘못을 지금에 와서 보상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수용하기에는 큰 나라로서 굉장한 체면이 걸린 문제입니다. 또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는 북한의 체면도 상당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핵 문제를 당장 해결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힘의 관계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체면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국제 정치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이 체면 게임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미국도 핵 문제를 당장 해결할 의사가 없고 북한도 이 문제를 질질 끄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을 지금 미국과 북한이 속으로는 서로 양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야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해서 미국과 북한은 현상유지를 통해서 자기들의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는 대해 나중에 북한측에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경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 문제에 진정으로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외교를 하셔야 합니다. 대미외교가 저는 더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북한하고 미국하고 볼 때 미국이 아까 얘기한 데로 체면을 지킬만한 큰 나라니까 체면도 지켜야겠죠. 그러나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미국이 체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나와서 해결할 경우 세계 평화국가로 부상하여 체면이 더 올라가고 한반도 동북아 핵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미국이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하는 것이 진
정한 균형자의 역
할임

싶은 것은 장관님께서 미국에 대한 외교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를 포기하고 체면도 포기하고 북한의 말을 들어주면서 해결하게 하는 한국의 외교가 균형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균형자론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호주도 지금 동아시아 동북아에서 균형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주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의 관계 속에서 한국과 호주가 차지하는 위상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장관님께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성공하시면 이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일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교과서 문제, 영토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느 때 보다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2월에 있었던 소위 '2+2', 즉 미국의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일본의 외교부, 국방부 장관 네 명이 만나서 했던 회의에서 미-일이 미래에 앞으로 공통으로 대처해야 할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 중국에 문제, 대만의 문제, 러시아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을 업고 동아시아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위상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일본은 미국과 세계적 차원에서 미-일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본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진출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는 일본의 오판은 외교적 자충수로 이어져

한국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저는 일본이 미국을 자기의 등에 업었다고 오판하면서 외교적으로 자충수를 두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외교를 반성하게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일본한테 놀아난 거예요. 미국은 일본과 보조를 맞추어 동북아 지역에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안보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더 큰 틀 안에서 들여다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은 실책입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이 힘을 실어주다 보니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외교 무대에서 오만함을 내 비추게 된 것이죠. 이번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발생한 아시아에서의 반일감정은 이러한 것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를 지향하는 미국인들이 일본하고 놀아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볼 때에 장관님께서서는 미국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결국 북핵문제, 이 지역의 안보문제, 일본 문제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가장 힘이 센 미국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또 일본에 동조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보았을 때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한미외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문에 난 대로 6월에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정말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미국을 움직이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본이 탈냉전 이후에 노력하는 것을 보십시오 미국을 잘 활용하면서 이 지역의 외교안보에서 자기들의 위상을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에 양국이 여러 현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를 기대

확보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96년 미일 동맹에 대한 재해석, 1997년 새로운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2001년 엇그저께 와서 이런 새로운 것,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서 다시 이 세상을 헤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그 동안 뒤흔었습니다. 지난 번 정상회담 때 새로운 미래를 지향한 진짜 포괄적 파트너십을 제기하는 것은 잘 하셨지만 제가 볼 때에 아까 말씀한대로 주한 미군철수 문제, 미군의 재배치 이런 것들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세계 전략 차원에서 결정했던 문제, 한국은 거기에 적응하면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큰 매듭을 지을 때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간다면 아주 작은 한국의 문제들은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 외교가 중요한 전환점을 놓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안보에 대한 공동성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아지역에서 공정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함

그 다음으로, 동북아지역에서 공정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과 일본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나름대로 위상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욕심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그런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 진짜 정직한 입장에서 이 지역에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나라와 양심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공조가 다시 정리되고 방향이 설립된다면 정말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규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감사합니다. 백종천 세종연구소 소장님께서 새롭고, 어떻게 보면 유익한 시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북핵 문제를 미국이 해결하지 않고 끌고 있다, 글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세는 3차 방정식 갖고도 안 되고 6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 답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 장관님께서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토론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전부 듣고 한번에 전부 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국민대학교 장명봉 교수) 저는 국민대학의 장명봉 교수입니다. 현재 북한 법 연구회장으로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 잘 들어서 여러 가지 배운 점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일 관계에 관해서 조금 여쭙어보고자 합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역대 정부하고 다른 점이라면 우리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외교에서는 자주외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면에서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한미 관계의 재정립이라든가 한일 관계의 재정립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밀실외교의 산물이
므로 이를 재검토
하고 재협상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역사적·외교적 중
대 과제임

한일 관계는 1965년 군사 정권의 밀실 외교를 통해서 정상화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오히라 메모가 밀실 외교의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러한 가운데 한-일간 기본조약이 나오게 되고 정권 협정 등이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본조약도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말하자면 이미 무효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1910년 을사조약 때부터 그것은 이미 무효로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8.15

해방 후부터 무효라는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출발부터 기본적인 해석의 차이를 낳았고 밀실외교를 통해서 3억불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법적으로 최종적인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배상과 관련된 예를 들면 일본은 정신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 버렸으니까 1965년에 끝난 것을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우리 참여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외교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과거 군사정권, 밀실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익과 민족의 이익을 저버린 이런 한일협정을 다시 재검토해서 재협상을 해야만 한일 관계가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첫 단추가 잘못 꿰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까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재협상을 통한 한일 관계의 재정립, 이것이 참여정부에서 해야 될 역사적, 외교적 중대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 희망포럼 공동의장) 한일 FTA는 양국간에 매우 중요한 경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전망 등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만 지금 반 장관님께서 다음 일정 때문에 곧 떠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오늘 발제자이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제가 일정상 9시 정각에는 여기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5분 내에 제가 간단

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달중 교수님하고 백종천 교수님께서 쪽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개 제가 설명드린 것에는 녹아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관계는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있으며, 균형적인 실용주의 외교, 국민의 참여의식과 민주주의에 걸맞는 외교를 해 나갈 것임

여러 가지 체감온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체감온도가 당장 없어지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한참 계속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말씀이 한미동맹관계가 시련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역사적인 전환기에 있다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환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련도 있을 수 있지요. 이러한 전환기를 거쳐가다 보면 아무래도 정부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체감온도가 다르고 시련이 있더라도 국가 이익에 입각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은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여러 가지 혼선도 있다, 흐름도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환기적 현상이 참여정부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참여도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외교 기조를 이야기할 때 보통 균형적인 실용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부나 아마 실용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정부는 없을 겁니다. 어느 정부든지 실용적인 외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균형적인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것은 한미 관계든지 한일 관계든지, 또는 한중, 한러 관계 등 우리 주요 우방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위상과 우리 국민들의 참여의식·민주의식에 걸맞는 외교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교의 복선화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한 과정에서 외교도 단선화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복선화 되었죠. 그 과정에서 부서간에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하고 흔히들 말할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갈등이 있다, 없다 등의 얘기를 하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사실은 지금 현재와 같은 구조나 조직으로 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외교안보 수석으로 있을 때 김영삼 정부에서도 지금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비슷한 안보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고,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그게 어느 정도 체계화·법제화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소규모로 움직였고 거기에 외교안보 수석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보보좌관이나 외교보좌관이 있으면서 그것은 보좌관으로서 집행기능이 아니라 보좌기능으로 내버려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상당히 확대 개편한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체계를 잘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통일부, 국방부 각각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매주 목요일에 하는 상임위 장관급 회의에서 조정이 되어 나가는 잘 조직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책수단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함

역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대화를 통해서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해야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책수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에 대해 거론을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현실적으로 우려할 점은 전체 국민총생산이 200억불 미만이고 1년에 수출입 통상 교역 규모도 20억불이

안되는 영세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해 나간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이 자초하는 셈이지요.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음

백 소장님께서 북-미 간에 현상유지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주장에 대해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흔히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으로서의 어떠한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첫 6자회담이 개시가 되었을 때 미국의 입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경했었습니다. 북한과 어떤 직접적인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 미국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할말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은 어떤 협상 대책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때에 여러 가지로 속을 다 터놓고 아주 격의 없는 대화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북한 핵 문제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이 일종의 글로벌 파워가 되다 보니까 북한 핵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모든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와 견해를 조금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 동맹관계에 기초함

균형자 역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고 제 설명이 불충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균형자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한미 동맹관계가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미-중간이든지 일-중 간에 어떤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직접적인 방향을 바탕으로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한미 동맹관계에 기초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조화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는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미 그러한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FTA 협상은
현재 거의 중단 상
태임**

일본과 관련해서 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간단하게 먼저 FTA부터 말씀을 드리면 FTA와 관련을 해서 한일간에 협상이 거의 중단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중점이 되는 문제는 농수산물 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양허 수준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일간에 FTA는 한일간의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지역 경제라든지 앞으로 있을 다른 FTA 협상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높은 차원에서의 아주 포괄적인 FTA를 하자고 일본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 주장이고 우리는 만나기 전에 일본이 현실적인 농수산물 양허 수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받
아야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음**

한일간의 관계가 지금 역사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거의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일본 외상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도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당신들이 거론하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니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제는 우리가 비단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신들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이러한 국가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고쳐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년 당장 고치기

어려우면 시간을 두고라도 차츰차츰 고쳐 나가야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고 그야말로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유엔의 여러 가지 동향을 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에 대한 자국의 지도력이나 신뢰성, 또 과거사에 대한 인식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평가가 고려되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협정의 재협상 보다는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양국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금 재협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볼 때 한일협정이 1965년에 되었고 또 지난 40년간 이러한 한일협정에 근거를 두고 많은 부수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한일간에 일종의 기본 틀로서 작용을 해왔는데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일협정과 관련해서 미진했던 부분, 보상이 제대로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이러한 한일 기본 협정에 따라서 마땅히 보상이나 배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되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기획단 같은 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폭 피해자 문제라든지 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도 이제까지 나름대로 여러가지 보상 조치를 취해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보상을 할 수도 있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감사합니다. 북한 핵 실험과 관련해서 대북 경고도 해주시고 또 한일 관계, 한미 관계에 가로 놓여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회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원 여러분께서는 매달 한번씩 열리는 동북아미래포럼을 잘 기억해주시고 이 포럼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 및 교열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sjhong@hri.co.kr) ☎ 02-3669-4182

이상우 선임연구위원 (swlee@hri.co.kr) ☎ 02-3669-4014
